

“이 대통령, 치솟는 물가부터 잡아라”

라면·공공요금 등 생계형 물가 서민생활 옥죄

관련 부처에 ‘물가안정’ 특명 실질적 대책 기대

‘성장도 좋고 규제완화도 좋지만 우선은 당장 치솟는 물가부터 잡아라’

25일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게 ‘고삐 풀린 물가잡기’라는 첫 과제가 주어졌다. 유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다 미국발 경기침체로 경제 전반에 멍구를 드리운 가운데 생필품과 공공요금 등 생계형 물가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첫 시험대는 ‘물가’=이명박 정부의 첫 작품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살리기’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우선은 급상승하는 물가부터 잡아야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곡물가격 상승으로 공산품과 식료품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는 갈수록 꽉막혀지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로, 이미 한국

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를 넘어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월 수입물가는 9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21.2%나 폭등했다.

따라서 오는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는 물가 오름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고삐 풀린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라면·사료간 인상=지난해 크게 오른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가격에 반영되면서 라면·과자류와 유제품 등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식품가격이 치솟고 있다.

업계는 원료인 밀가루·치즈 등의 가격폭등으로 제품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밀(소맥)과 대두(콩)의 국제 선물가격은 1년 동안 50~60% 뛰었고, 치즈 역시 중국의

수요 급증 등에 영향받아 반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했다.

곡물과 강세로 사료값이 뛴데다 수급 불균형으로 비료가격까지 오르면서 당장 축산 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자자체와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뇌지 사료값은 현재 kg당 400원 안팎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90~300원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고, 비료 역시 지난 달부터 평균 24% 인상됐다. 여기에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면세유 등유가 7개월 만에 1ℓ 당 481원에서 745원으로, 경유가 469원에서 756 원으로 61% 뛰었다. 봄철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이런 농업 원자재 가격 오름세는 더욱 두드러져 농민들에게 시름을 더하고 있다.

◇어떤 대책 나올까=이 대통령으로부터 물가 안정이라는 ‘특명’을 내려받은 재정경제부는 개별 품목별로 물가동향을 재점검하며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부는 우선 산자부, 농림부와 협의해 오름 세가 계속되고 있는 원유와 밀·육수수·사료용 곡물 등 주요 원자재 품목의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을 억제하는 자자체에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돈·한우 농가에 1조원 규모의 사료 구매자금이 지원된다.

사료 외상구매에 따른 이자부담이 연 12~24%로 과중한 만큼 정부가 연 3%, 상한기간 1년 등의 좋은 조건으로 구입자금을 밸리준다는 얘기다.

농림부는 지난 15일 농협 등을 불러 지원기준 등을 논의했고, 지금은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과 예산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재원 협의가 끝나면 다음달 초 신임 장관 취임 후 구체적 방침을 받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등록금·납입금 등의 인상 자체를 각급 학교에 요청하고, 고액수강료 징수 등 학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육물가 상승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사재기·투기·고액수강료 등

새정부 첫 세무조사

정부가 물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사재기, 부동산투기, 고액 수강료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격 인상 등을 빌미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2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강도높은 물가안정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철근 등의 사재기(매점매석) 행위와 부동산 투기 협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료가격 상승을 빌미로 생필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예외없이 의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학기를 맞아 서민의 사교육비 부

답을 가중시킬 수 있는 학원의 고액 수강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의 신고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품목들의 사재기 여부에 대해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사재기 가격이 뛰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기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한 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조세포탈, 담합 등이 발견되면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업계의 이파른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업계가 담합해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칼슘 2배’ 사과·딸기

신세계 이마트 서울 용산역점은 24일 칼슘성분 강화비료로 재배해 기준의 상품보다 칼슘이 2배 이상 많이 함유된 고당도 사과와 딸기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건설사 부도 급증 대안 절실

작년 부도업체 수 58% 늘어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공공공사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건설회사 부도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한건설협회가 24일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사는 총 120개사로 이 가운데 공공공사 비중이 100%인 업체는 15.8%인 19개사로 집계됐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런 부도업체 통계는 전년도의 12개사에 비해 58% 늘어난 것이다. 또 2006~2007년 2년간 부도 건설사 중 공공공사 수행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은 총 51개사로, 전체 부도 건설사의 22.6%에 달했다.

협회는 이처럼 공공공사 비중이 큰 회사의 부도가 늘고 있는 것은 최저가낙찰제

참여정부, 주가 상승률 ‘역대 최고’

5년간 175% 올라

25일 막을 내리는 참여정부 시대 주식시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작된 이후 최대 호황을 기록했다.

2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일인 2003년 2월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코스피 지수는 616.29에서 1,686.45로 무려 173.65% 급등했다.

5년 단임제가 시작된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의 지수 상승률은 2.44%에 불과했고, 집권 말기에 외환위기가 더진 김영삼 대통령 시대에는 지수가 19.61% 뛰어졌다. 국가부도 사태라는 참화 속에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도 주식시장은 13.94% 상승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주식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경기회복이 맞물리면서 국내외 유동성이 급속히 팽창해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는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했다.

집권 말기에는 서브 프라모 모기지 부실이 불러온 미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역대 최고 주가 성적표가 훼손될 정도는 아니었다.

10대 그룹별로 보면 현대중공업 그룹의 시가총액이 32조2천720억 원으로 무려 2천005.84% 급증했으며 금호아시아나그룹(11조3천406억 원, 1천00.71%), 현화그룹(7조2천263억 원, 922.11%), GS그룹(12조2천585억 원) 등도 시장 가치가 3~10배 정도 커졌다. /연합뉴스

제약업체 공채 잇따라

제약업체들이 인력채용에 속속 나서고 있다.

24일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다음달 3일부터 상반기 공채를 시작한다. 모집분야는 해외·영업·연구개발·제조공정·임상·마케팅 등이다.

종근당은 제약영업을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장교 출신자는 우대한다.

대웅제약은 물류·품질관리·임원비서·교육 부문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뽑는다. 물류는 전문대졸 이상, 품질관리는 전문대졸 혹은 4년제 대졸자로 산업공학·화학공학·제약·전공자 등 부문별로 지원자격 요건과 채용전형, 일정이 다르다. 이밖에 삼일제약과 수도약품공업도 신입·경력사원을 모집 중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대학교 학교기업 HIMEC	[국내] [제조] 일본 IT취업전제 연수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15	062-380-8400
(주) 아인텔러서비스	LGE텔레콤 서부고객센터 상담사(정규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2/25	062-601-7213
(주) 혁성엔지니어링	정규직 토목설계 시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6	061-375-8005
(주) 드림랜드	일본어행사 내근직, 현지기아드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6	062-227-4404
(주) 엔지티크	[광주/서울/부산] 프로그램 개발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6	062-675-8750
인포드림넷(주)	[하나로텔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236-0217
(주) 보루네오기구	판매 및 매장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374-8847
(주) 하이모 광주지점	마케팅 및 관리직 경력시원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2/29	053-431-0321
(주) 근화씨엔씨광주지사	경리 / 재고관리 경리시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350-8383
(주) 현대G&A	품질관리 경력시원	초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2/29	032-584-221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막 증착 및 식각 공정/정비 운영 연구 별장직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2	062-606-508
(주) 중원철강	출남 결사보기 회계/사무보조, 전산입력·여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03	062-374-6991
대통건설(주)	현장공무(과/차장급) / 현장소장(부장급)	초대졸/경력10년	2800~3600	03/03	061-763-2634
AIG손해보험	AIG 순천CS 센터 팀장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3/03	061-906-763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새 대통령 출범후 달라질 부동산 제도

9월 지분형분양주택 등장

도심 재개발 등 활기 뛸듯

이명박 정부가 뒷을 올립에 따라 부동산 제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대신 새로운 반값아파트인 ‘지분형 주택’이 등장하고 민간 기업이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도시 개발보다는 도심 재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모드가 전환된다.

◇9월부터 지분형 분양주택 등장=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부터는 인기있는 공공택지에서 지분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제도로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다. 실수요자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에 임차권, 처분권을 갖게 된다.

참여정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폐지되거나 재시행하더라도 큰 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심 재개발로 무게중심 이동=참여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주로 신도시를 개발해 왔으나 이명박정부는 도심 재개발에 큰 비중을 둘 전망이다.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 확대, 역세권 주변 개발, 산자·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외곽이 아닌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려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재건축 용적률을 상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고 도심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신혼부부용 주택’ 도입=신혼부부나